

---

#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

---

2024. 7. 3.

관계부처 합동



# 목 차

I . 경제여건 점검 및 평가 ..... 1

II . 하반기 정책방향 ..... 3

[별첨1] 2024~2025년 경제전망 ..... 10

[별첨2] 주요 정책 캘린더 ..... 13



# I. 경제여건 점검 및 평가

상반기 '민생 회복'에 전력 → 물가·성장 등 지표 개선됐으나,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

□ 올해 경기회복세 개선 전망 속에서도 상반기에 내수와 민생이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정책 운영

① '민생의 핵심'인 물가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는 가운데, 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강화

\* 유류세 인하 및 농산물·식품원료 할당관세,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투입(납품단가 및 할인 등 지원)

② 고물가·고금리 영향을 크게 받는 소상공인·취약계층 어려움 완화 노력

\* 소상공인 3대 부담(에너지·고금리·세부담) 경감 및 경쟁력 강화 지원, 저소득층 생계급여 역대 최대폭 인상

③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·관광 활성화, 지역경제·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, 수출 개선 가속화 병행

\* 상반기 민생·SOC 예산 신속집행, 카드사용액 추가 소득공제, 숙박쿠폰 확대, 역대 최대규모 무역금융 공급

④ 부동산 PF,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 강화

\*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정착률 지원,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을 통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

⇒ 그 결과, 물가는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둔화 흐름을 보이며 2%대로 하락,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 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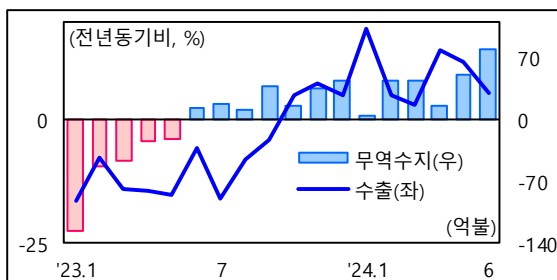
\* 물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흐름 지속,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,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1.3% 성장('24.1/4분기)

□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는 공급측 요인 완화로 2% 초중반대로 둔화되고, 경기도 수출 회복세가 유지되며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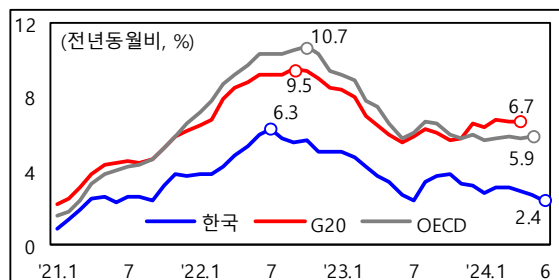
\* 소비자물가(%): ('24.1/4)3.0 (4)2.9 (5)2.7 (6)2.4 → (하반기)2% 초중반

○ 다만,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·고금리 영향 및 수출-내수 부문별 회복속도 차이 등으로 당분간 체감경기 어려움 지속될 가능성

수출증감률 및 무역수지 추이



주요국 물가상승률 추이



##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 해소 필요

① (소상공인) 고금리 장기화, 임대료·인건비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 지속되는 가운데, 매출 회복이 지연되며 경영여건 악화

○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영향이 누적되며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

\* 자영업자 대출잔액(기말, 조원): ('19)686 → ('23)1,053 \*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(기말, %): ('19)0.79 → ('23)1.26

○ 소상공인 영세성, 디지털화 지연 등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 지속

② (물가·생계비) 물가상승률은 2%대로 둔화되었으나,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의 실질구매력 제약,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지속

○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물가가 이상기후 영향 등으로 높은 수준

\*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상승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3/4)2.6 (4/4)7.7 ('24.1/4)10.4 (4)10.6 (5)8.7 (6)6.5

③ (내수·건설투자)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 속도로 체감경기 개선 제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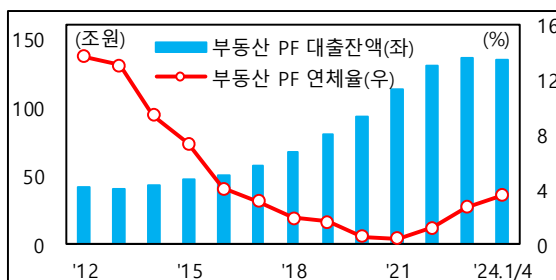
○ 특히, 건설투자의 경우 신규공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역경기 및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

\* 지역경제(GRDP)에서 건설투자 비중('22년 기준 명목, %): (전국)16 (서울)8 (대구)21 (인천)24 (세종)27 (강원)2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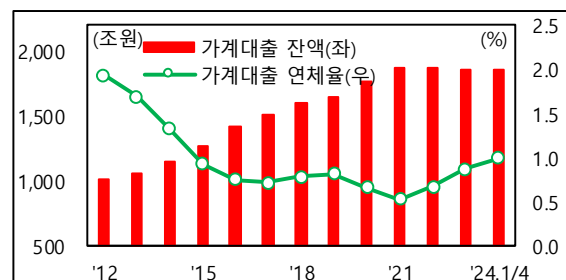
④ (잠재리스크) 부동산 PF·가계부채 등 하방 리스크 잠재

○ 특히, 부동산 PF의 경우, 건설·금융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질서있는 연착륙과 함께,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반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

부동산 PF 대출잔액 및 연체율(기말) 추이



가계대출 잔액 및 연체율(기말) 추이



## II. 하반기 정책방향

- ◇ '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취약부문 중심의 민생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대응 강화
  - 특히, 현장 애로사항 점검\* 등을 바탕으로 ①소상공인·서민 지원, ②물가안정·생계비 경감, ③건설투자 등 내수 보강, ④잠재리스크 관리 등에 중점
  - \* 범부처 합동 '민생현장 동행팀' 등을 가동하여 상반기 중 70여회 이상 현장방문 통해 현장 애로사항 점검
- ◇ 단기 대응과 함께 구조개혁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「역동경제 로드맵(7.3일, 별도 발표)」 추진 병행

### 1 소상공인·서민 지원

#### ◇ 「소상공인·자영업자 종합대책」을 신속 추진 (상세 대책 별첨)

기본방향		
경영부담 완화	비용 부담완화	매출기반 구축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지원 3종 세트 추진</li> <li>▶ 배달·임대·전기료 등 비용 부담완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매출채권 팩토링 소상공인 우선공급</li> <li>▶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·가맹점 확대</li> </ul>
성장촉진 지원	스마트·디지털化 및 Scale-up	판로 확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진공-중진공 연계</li> <li>▶ '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' 신설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해외쇼핑몰 입점 컨설팅+현지화 지원 확대</li> <li>▶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</li> </ul>
재기지원	채무조정	취업·재창업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</li> <li>+ 취업·재창업 연계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소상공인 특화취업 프로그램 신설</li> <li>+ 준비된 재창업 지원</li> <li>▶ 점포철거비 확대(※250→改400만원)</li> </ul>
인프라 구축	▶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구축	

#### □ (경영부담 완화) 금융지원 3종 세트\* 추진 + 주요 비용(배달료·임대료·전기료 등) 부담완화

\* ①정책자금 분할상환 지원대상 확대, ②보증부 대출 만기연장, ③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

- 매출채권 팩토링 프로그램 확대,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·가맹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등 통해 매출기반 확대

#### □ (성장촉진) 소상공인 스마트·디지털化 및 소기업으로의 도약 지원

- 업종별·규모별 사업장 진단 등을 기반으로 스마트기기 및 고객·매출관리 소프트웨어 패키지 보급
- 소상공인진흥공단-중소·벤처기업진흥공단 연계 “마일스톤 방식 정책자금” 신설

□ (재기지원) 과감한 채무조정, 취업·재창업 연계 지원 등 확실한 재기지원

- 채무조정 대상 확대\* 등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확대(30→40조원+a)하고, 취업·재창업 연계지원\*\*을 통해 취약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강화

\* 지원대상 사업영위기간 확대: (現)'20.4월~'23.11월 → (改)'20.4월~'24.6월  
신청기간 연장: (現)~'25.10월 → (改)~'26.12월

\*\* ①취업 교육(국민취업지원제도 內 프로그램, 고용부) 또는 재창업 사업화 프로그램(희망리턴패키지 內, 중기부) 안내·연계  
②교육 이수시, 원금감면율 10%p 상향 ③교육 이수 후 취업·재창업 성공 시, 공공정보 등록 즉시해제(現 1년)

-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확대(250→400만원)하고,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(국민취업지원제도 內, 최대 6개월) 운영

□ (인프라) “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” 가동

- 소상공인이 쉽게 찾아가고, 금융, 취·창업, 경영안정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원스톱 플랫폼 구축

\* (1단계 : 7월)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(77개)를 중심으로 부처별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 안내  
(2단계 : 8월) 중기통합콜센터(1357)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 
(3단계 : '25.11월~)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(중기통합콜센터1357 소상공인 전용 채널 신설 등)

◇ **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 1조원 투입 → 소상공인·서민 등 집중 지원**

-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전기료·이자 등 필수 비용부담 경감(약6,800억원),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·생활안정자금(+5만명, 약2,800억원) 등 지원 확대

주요 사업

- ▶ 소상공인 전기료(20만원) 지원대상 확대(연매출 3천만원 이하 → 6천만원 이하)
- ▶ 소상공인 용자 지원대상 확대(저신용자 → 저신용자·중신용자)
- ▶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(신용점수, 대출일 등 요건 완화)
- ▶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(4.1만명 추가 지원)
- ▶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용자지원(0.3만명 추가 지원)
- ▶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(0.6만명 추가 지원)

□ '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.5배 이상 확대 편성

-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, 청년·노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등 집중 투자

'25년 추진 예정 사업

- ▶ (국가장학금)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100→150만명 확대, 근로장학금 14→20만명 지원, 주거장학금(최대 年240만원) 신설
- ▶ (육아·돌봄) 육아휴직급여(現 통상임금 80%) 인상,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(現 중위 150%) 및 자부담(現 15~85%) 완화
- ▶ (한부모 양육)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'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' 단계적 도입('25~)
- ▶ (노인) 경로당 식사제공 주5→7일까지 단계적 확대, 고령자 복지주택 年1→3천호 확대
- ▶ (청년 연구자) 이공계 대학원생 대상 연구생활장학금 신설



## 2 물가안정·생계비 경감

### ◇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정착 위해 정부·공공기관·소비자단체 등 공동대응

□ (재정지원) 농수산물 할인지원·비축, 유통구조 개선, 에너지 바우처 등 하반기 물가 관리 및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 5.6조원 지원

① '24년 하반기 과일류, 오렌지농축액 등 51개\* 농산물·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(약 1,600억원 지원) 적용을 통해 가격 안정 유도

\* (과일류) 체리, 바나나 등 28개 / (식품원료) 전지분유, 버터밀크 등 19개 / (채소류) 무, 양배추 등 4개 품목

② 과일 계약재배를 확대\*하는 한편, 마늘·양파·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, 김 신규 양식장 개발(2,700ha) 등을 통해 수급 우려에 선제적 대비

\* 계약재배 물량(만톤): ('23년) 사과 4.9, 배 4.2 → ('24년) 사과 6, 배 4.5 → ('30년) 사과 15, 배 6

③ 저소득층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·한부모) 대상 정부양곡(시중가격 40%) 판매 가격을 20% 추가 인하\*, 한우·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(30~50%) 행사 개최(9월)

\* 가격인하 사전 고지 등 준비기간을 거쳐 9월 신청분부터 할인 반영

④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예약거래\* 등 거래방식 다양화(12월), 수산물 거래 개시(7.1일) 및 품목 확대 등 추진

\* (오프라인도매시장) 상품인도 24시간 이내 정가수의 예약거래 → (온라인도매시장) 보다 장기화된 거래 가능

□ (공공요금) 원가 절감,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,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·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 완화

○ 금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부터 안정적 공공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부담 완화 등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성과 반영

□ (시장 감시) 용량 등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 부과('24.8월~), 공공플랫폼(한국소비자원 등)을 통해 정보 제공 확대하여 편법인상 방지

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중심으로 물가 불안품목·분야 등에 대한 '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'를 발표(매분기)하여 합리적 소비 뒷받침

\* 예) 슈링크·스킵플레이션 사례,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 유지·인상 품목, 지역별 상비약 가격 편차 등 조사·분석

\*\* 물가감시 리포트에 포함된 품목은 공정위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에서 중점적으로 법 위반 혐의 등을 모니터링

② 결혼 관련 주요 서비스에 대해 정기적으로 가격 조사·공개\*

\* 드레스 임대, 사진촬영, 메이크업, 예식장 대여 등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(참가격) 등 통해 제공 추진

## ◇ 서민 핵심 생계비 경감, 중소기업 근로자·실업자 등 생활안정 지원

### 【핵심 생계비 경감】

- (의료) 비급여·본인부담금 등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\*(복권기금 +100억원)  
\* (기존) '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하여 지원 여부 판단 → (변경) 1년 이내 발생한 '모든 질환에 대한 의료비 합산'(24.1월~)
- (식품) 시범사업 중인 농식품 바우처를 전국으로 확대(24개→229개 지자체)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료품비 부담 경감('25년)
- (교육) '24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동결(1.7%)하고,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\* 및 이자면제 대상·기간\*\*을 확대하여 학자금 부담 완화  
\* (기존) 학자금지원 8구간까지 → (개선) 9구간까지 확대, 단 생활비 대출은 긴급한 생계 곤란(부모 사망 등)에 한정  
\*\* 대상: (기존) 수급자·차상위·다자녀가구 → (개선) 학자금지원 5구간, 상환유예자(실·폐업, 퇴직, 육아휴직, 재난) 추가  
기간: (기존) 재학기간 → (개선) 기존 대상은 상환 시작 전, 학자금지원 5구간 이하 가구는 졸업 후 2년 내까지 확대
- (통신)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를 재추진하는 한편, 알뜰폰사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를 업계와 협의하여 알뜰폰 경쟁력 제고 지원
  - 거래사실 확인 시스템 구축('24.下) 등을 통해 중고폰 시장 활성화 유도  
\* (거래사실 확인시스템) 중고 단말 거래사실 확인을 통해 단말기 분실·도난 해제 권한을 중고 단말 구매자로 확대 (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) 중고 단말 성능확인서 발급 등 이용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인증·공시
- (임대료) 임대료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임대인\* 제도 기한을 2년 연장('24.12→'26.12)  
\*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%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(비과세 등)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

### 【생활안정 지원】

- (중소기업 근로자) 中企 근로자 소득 확충을 위한 소득세 감면 지원 강화
  - 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(70~90% 감면) 대상 요건을 완화\*  
\* (現) 청년, 고령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(퇴직한 날부터 2~15년 이내 동종 업종 재취직)  
(改) [경력단절여성] 퇴직한 날부터 2~15년 이내 "동종 업종 재취직" 요건 폐지 / [경력단절남성] 감면 신설
  - ② 경영성과 공유 촉진을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수령한 성과급의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('24.12→'27.12)  
\* 구체적 세액공제 및 감면 내용은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('24.7)
  - ③ 中企 핵심인력의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\* 수령시 기업기여분 소득세 감면을 3년 연장('24.12→'27.12)하고, 공제요건 완화(공제납입 5→3년)  
\* 만기공제금은 근로자기여금, 기업기여금으로 구성되며, 기업기여금에는 근로소득세 부과
- (실업자) 실업자·비정규직 등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\* 한도를 대폭 확대(1인당 1,000 → 1,500만원, ~'24.12월 한시)  
\* 기존 중위소득 80% 이하인 실직자, 비정규직, 무급휴직자 등 대상 생계비 용자 프로그램

□ (취준생) 취약계층\* 등이 국가전문자격 시험\*\*에 응시할 경우,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자격시험별 근거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

\* 기초·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등 \*\* 예) 공인회계사, 보험계리사, 손해사정사, 건축사, 전문간호사 등

□ (불법추심 피해자)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·지인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'채무자대리인 서비스' 확대 개편\*

\* 지원대상: (기존) 채무자 → (개선)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

□ (무주택자)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→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\*

\* (기존)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서만 청약저축 납입액 40% 소득공제 및 연 소득 3천6백만원(종합소득 2천6백만원)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대상 이자소득 비과세(500만원 한도) → (개선)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(청약저축) 및 이자소득 비과세(청년우대형 청약저축)

### 3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

#### ◇ 건설투자 등 활성화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

##### 【공공부문 +15조원 투·융자 확대】

□ 공공투자·민자사업·정책금융 하반기 투·융자규모를 '24년 연초 계획 대비 +15조원 확대하여 건설투자 등 활성화 뒷받침

① '24년 계획의 차질없는 집행 및 내년 사업 당겨집행 유도\*, 신용보강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확대

\* 공공기관 재무성과 평가시 당겨집행 실적 고려(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)

② 기존 및 새로운 민자 대상시설\*을 적극 발굴하여 '24년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를 연초 대비 +5조원 수준 확대(15.7 → 20.0+a조원)

\* (기존) 철도·도로·항만 등 SOC 위주 사업 발굴 + (신규) 복합문화·관광·환경시설 등 다양한 민간 수요에 대응

③ 당초계획 대비 정책금융\* 융자·보증 등 지원규모를 +8조원 확대(598.9 → 606.9조원)

\* 산은, 기은, 수은, 무보, 기보, 신보, 지신보, 증진공 기준

##### 【준공 지연요인 해소】

□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애로를 겪는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

○ 공사비 분쟁 우려시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고,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단축하는 등 공사비 검증 신속화(5→3개월)

□ 국토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T/F를 결성하여 자재·노무·경비 등 공사비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, 하반기 중 품목·항목별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

○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

## 【 지역경제 활력 제고 】

- 지역활성화투자펀드\* 3천억원 연내 전액 소진을 목표로 지역개발 투자 촉진

\*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(3천억)를 바탕으로 지자체·민간이 SPC 설립 및 자펀드 결성(최소 총사업비 3조원 규모까지 지원)

- 유휴·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를 17개 권역으로 확대(2→17개)

- 공공임대주택 노후화\*에 대응하여 기존 공공임대를 고밀 재개발하여 생활 복합형 공공주택단지이자 지역 생활·문화 중심공간으로 리모델링\*\*

\* 30년 이상 9.8만호, 25년 이상 30년 미만 9만호 등

\*\* 생애주기별 관리전략 마련('24.12)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신속 추진(3개소, ~'25.12)

## ◇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 +α 통해 경기 회복 확산

- (내수활성화 입법) '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 제시된 민생안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 재추진

### '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입법과제

- ▶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▶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 취득시 1주택자 간주
- ▶ 대형마트 영업규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▶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규제(300가구 미만) 폐지
- ▶ 미니관광단지 신설 및 지정·승인 권한 이양 ▶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

- (소비 보강) 구매 부담 큰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“3종 패키지” 지원

- ① 현재 전기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 중인 업계할인 비례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대상을 전기 화물차로 확대('24년 한시)
- ②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△70% 한시 인하조치 재입법 추진(한도 100만원)
- ③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\* 특례 적용기한을 '26년까지 추가 연장

\* 하이브리드·전기차·수소차 대상으로 감면하되, 구체적 감면한도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('24.7)

- (국내관광 유도) 민박업 제도화,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 촉진

- ① 농어촌 민박 면적제한 완화\*,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(「농어촌정비법」 개정)

\* (현행) 230m<sup>2</sup> 미만 → (개선) 지자체 자율 결정

- ② 도시민 주말·체험영농 확산을 위해 「농촌체험형 쉼터」 시행(12월)

-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활동 등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(연면적 33m<sup>2</sup> 이내)할 수 있도록 허용\*

\* 화재, 재난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 부여

- ③ 추석 기간 비수도권 대상 국내관광 숙박 쿠폰 20만장 발행

- (투자·수출 촉진) 계획된 시설투자 자금지원(52조원) 중 27조원\*을 하반기에 공급하고, 유망국가·품목을 중심으로 하반기 무역금융 192조원 집중 지원

\* 기관별 공급규모: 기은(11.3조원), 산은(12.7조원), 신보(2.0조원), 중진공(0.2조원) 등

- 「투자 익스프레스」를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발굴하고, 「3차 투자 활성화 대책\*」을 마련하여 연내 발표

\* 예) 입지·환경 등 규제 합리화, 투자계획 신속 이행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·효율화 지원, 투자 인프라 보강 등

## 4 잠재리스크 관리

### 【부동산PF 시장 안정화】

- 94조원\* 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**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**되지 않도록 하면서, **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·지원\*\*** 강화

\* PF보증(30조원), 건설공제조합 보증(10조원),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(HUG, 5조원) 등

\*\* (정상 사업장)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 유도

(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) PF정상화펀드(1.1조원), LH 사업장 매입(3조원) 등 정상화 지원

- 근본적으로는 **PF 사업구조 개편**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「**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**」 마련·발표

- 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·지원,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체 내실화 추진
- ②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,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
- ③ 부동산 PF 대출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,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
- ④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·관리 체계화

### 【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 유지】

-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'24년말 **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%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 추진**

- 스트레스 **DSR 적용범위 확대\***(9월) 등 **DSR 규제**를 점진적 내실화·확대하고, **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\*\*** 등 주담보 대출의 장기·고정금리 취급 기반 조성

\* (1단계)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→ (2단계)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+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

\*\* 예)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 출시, 커버드본드 발행·공시 인프라 구축 등

### 【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】

- 빅데이터(신용카드 결제액 등)·AI 모형 등을 활용하여 소비·투자 등 실물경기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·진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('24.下~)

\* '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' 연구용역 추진(KDI, '24.下)

# 별첨 1

## 2024~2025년 경제전망

	2023년	2024년 <sup>e</sup>		2025년 <sup>e</sup>
		[수정]	[당초]	
■ 실질성장률(%)	1.4	2.6	2.2	2.2
■ 소비자물가(%)	3.6	2.6	2.6	2.1
■ 취업자증감(만명)	32.7	23	23	17
- 고용률(%, 15세 이상)	62.6	62.8	62.8	62.9
■ 경상수지(억불)	355	630	500	700
- 수출(전년비, %)	△7.5	9.0	8.5	6.0
- 수입(전년비, %)	△12.1	2.0	4.0	4.5

### 1 2024년 경제전망

① (성장) 예상보다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**2.6%** 성장 전망

\* 성장률(전기비, %): ('23.1/4) 0.4 (2/4) 0.6 (3/4) 0.8 (4/4) 0.5 ('24.1/4) 1.3

○ 수출은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,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전 등으로 하반기에도 개선 흐름을 지속할 전망

\* 수출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△12.8 (2/4)△12.0 (3/4)△9.7 (4/4)5.7 ('24.1/4)8.1 (2/4)1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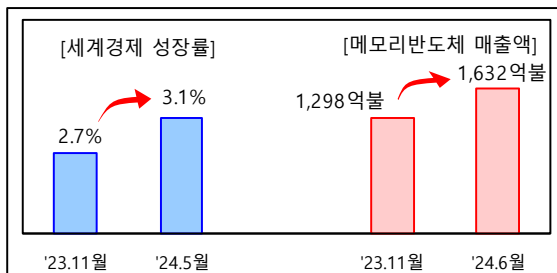
○ 내수는 물가 등 제약요인이 완화되겠으나, 부문별 회복속도는 차이 예상

▪ (소비) 가계 이자 부담이 높은 수준이나,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둔화,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등이 소비 제약요인 완화 예상

▪ (투자) 수출 증가에 따른 투자수요로 설비투자는 회복이 예상되나, 건설 투자는 신규공사 위축, 부동산 PF 리스크 등으로 어려운 여건 지속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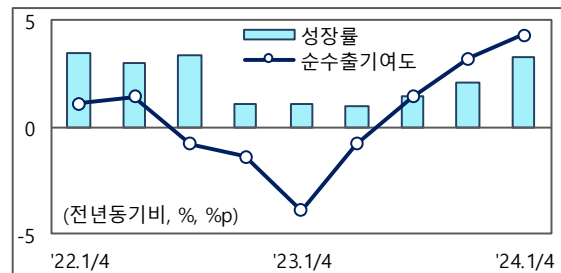
\* 건축 착공면적 증감률(전년동기비, %): ('23.1/4)△28.7 (2/4)△46.5 (3/4)△44.2 (4/4)1.2 ('24.1/4)△9.6

'24년 세계경제 및 메모리반도체 매출 전망 변화



\* 출처: OECD, WSTS

성장률 및 순수출 기여도 추이



\* 출처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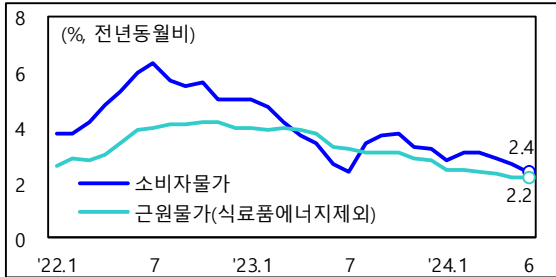
② (물가) 둔화 흐름이 이어지며 소비자물가는 **2.6%** 상승 예상

- 상반기에 농산물·석유류 등 상방압력이 다소 확대되었으나,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측 요인이 완화되며 **2%** 초중반대까지 둔화 예상

\* 두바이유가 전망(\$/b, 자체추정): ('23) 82 ('24°) [당초] 81→[수정] 84 [( '24.1/4) 81 (2/4) 85] ('25°) 8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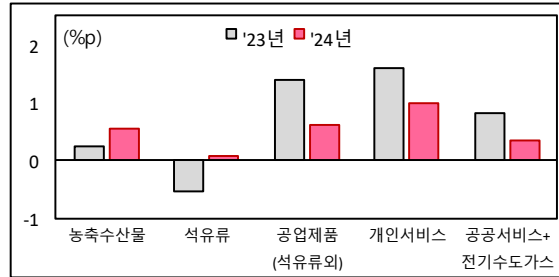
- 다만,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, 기상여건 등 높은 불확실성 상존

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



\* 출처: 통계청

품목별 기여도 전망



\* 출처: 자체 추정

③ (고용) 고용률은 경기회복 흐름 등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**62.8%**, 취업자 수는 '22~'23년간 큰 폭 증가의 기저영향 등으로 작년보다 둔화된 **23만명** 증가 예상

\* 고용률(15세 이상, %): ('22)62.1 ('23)62.6 ('24.1)61.0 (2)61.6 (3)62.4 (4)63.0 (5)63.5

\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2)81.6 ('23)32.7 ('24.1)38.0 (2)32.9 (3)17.3 (4)26.1 (5)8.0

④ (경상수지) 상품수지가 개선되면서 작년보다 큰 폭 증가한 **630억불** 흑자 전망

\* 경상수지(억불): ('22) 258 ('23) 355 ('24.1~4) 166 [( '24.1) 30 (2) 69 (3) 69 (4)△3]

- 수출 회복 등으로 상품수지는 흑자폭 확대, 해외여행 증가와 작년 일시적 배당유입 확대 효과 소멸 등으로 서비스·소득수지는 적자 예상

\* '23년 실적→'24년 전망(억불): (상품수지) 341→720 (서비스·소득수지) 14→△90

## 2 2025년 경제전망

① (성장) 대내외 여건 개선 등으로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**2.2%** 성장 전망

- '24년 큰 폭 성장의 기저영향이 있겠으나, 글로벌 고물가·고금리 영향 완화, 세계교역 개선, 반도체경기 호조 지속 등이 성장세 뒷받침 전망

\* '24~'25년 전망: (세계교역 증가율(WTO)) 2.6→3.3% (글로벌 메모리반도체 매출액(WSTS)) 1,632→2,043억불

② (물가) 유가 오름세 둔화, 원가부담 축소에 따른 가격 인상압력 완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근접하는 **2.1%** 상승 예상

③ (고용) 고용률은 경기회복에 따른 노동수요가 뒷받침되면서 **62.9%**,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'24년 대비 다소 둔화된 **17만명** 증가 전망

④ (경상수지) 수출 증가세 지속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으로 **700억불** 흑자 예상

## 2024~2025년 경제전망 요약

(전년동기비, %)

	'23년 실적	'24년		'25년 <sup>e</sup> 연간
		1/4	연간 <sup>e</sup>	
전망 전제				
세계경제(PPP)*	3.1	-	3.1	3.2
Dubai 유가(\$/bbl)	82	81	84	81
실질 GDP	1.4	3.3	2.6	2.2
민간소비	1.8	1.0	1.8	2.3
설비투자	1.1	△1.0	2.0	3.8
건설투자	1.5	1.6	△1.2	△1.2
지식재산생산물투자	1.7	2.5	2.5	3.0
경상 GDP	3.3	7.3	5.5	4.5
고용률(15세 이상, %)	62.6	61.6	62.8	62.9
취업자 증감(만명)	32.7	29.4	23	17
소비자물가	3.6	3.0	2.6	2.1
경상수지(억달러)	355	168	630	700
상품수지(억달러)	341	189	720	800
수출(통관,%)	△7.5	8.1	9.0	6.0
수입(통관,%)	△12.1	△11.1	2.0	4.5
서비스·본원·이전 소득수지(억달러)	14	△21	△90	△100

\* OECD Economic Outlook ('24.5월)



## 별첨 2

## 주요 정책 캘린더

주요 정책과제	부처	시기
<b>1. 소상공인·서민 지원</b>		
■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지원 플랫폼 구축 추진	중기부, 고용부, 금융위	7월
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대·추가공급	중기부	7월
■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축소	중기부	9월
■ '25년 주요 민생지원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.5배 이상 확대 편성	기재부	9월
■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관련 금융권 협약 개정·시행	금융위	9월
<b>2. 물가안정·생계비 경감</b>		
■ 51개 농산물·식품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	기재부, 농식품부	7월
■ 마늘·양파·건고추 14천톤 신규 비축	농식품부	7월
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	농식품부, 해수부	7월
■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추진	기재부, 복지부	7월
■ '24.2학기 학자금대출 기본계획 수립·시행	교육부	7월
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대상 확대	금융위	7월
■ 제품 주요정보 변경시 소비자 고지의무 부과	공정위	8월
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확대(~'24.12월 한시)	고용부	8월
■ 저소득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격 20% 추가 인하	농식품부	9월
■ 한우·한돈 자조금 활용 할인(30~50%) 행사 개최	농식품부	9월
■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기한 연장	기재부	9월
■ 「소비자 물가감시 리포트」 발표	기재부	3분기
■ 취약계층 등 국가전문자격 시험 응시 시 응시수수료 부담 경감	법제처 등	3분기
■ 김 신규 양식장(2,700ha) 개발	해수부	10월
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장기 예약거래 등 거래방식 다양화	농식품부	12월

주요 정책과제	부 처	시 기
■ 결혼 서비스 가격 조사 및 공개	기재부, 공정위	12월
■ 하반기 중 단통법 폐지 재추진	과기부, 방통위	12월
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 완화	기재부	12월
■ 경영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적용 기한 연장	기재부	12월
■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세제혜택 적용기한 연장	기재부	12월
■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에 대한 청약저축 세제지원 확대	기재부	12월
<b>3.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</b>		
■ 민생안정 과제 등 내수 활성화 입법 재추진	전 부처	7월
■ 농어촌 민박 관련 규제 합리화	농식품부, 해수부	3분기
■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 확대	기재부	12월
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프로젝트 발굴 지속 추진	기재부, 행안부, 금융위	12월
■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위한 「생애주기별 관리전략」 마련	국토부	12월
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	기재부	12월
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 재추진	기재부	12월
■ 「농촌 체류형 쉼터」 시행	농식품부	12월
■ 공공주택 사업장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 현실화	국토부	4분기
■ 「3차 투자 활성화 대책」 발표	기재부	4분기
<b>4. 잠재리스크 관리</b>		
■ 부동산 PF 시장 94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	국토부, 금융위	7월
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0% 초반 수준 관리	기재부, 금융위	7월
■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경기진단 시스템 구축(연구용역)	기재부	7월
■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점진적 확대	금융위	9월